실속 재테크

자통법 시행 후 뜬 CMA

급여통장 개설·여윳돈 굴려라

하루만 맡겨도 年 5% 안팎 금리 보장

수시 입출금…고객보호 강화 가입 적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재테크 상품으로 뜨고 있다.

▲CMA 어떤 혜택 있나=자통법 시행의 최대 수혜 상품으로는 증권사 CMA가 꼽힌다.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자동이체하는 것과 같은 결제기능이 없어 불편했지만, 자통법 덕택에 은행계좌가 누려온 이런 특권을 조만간 공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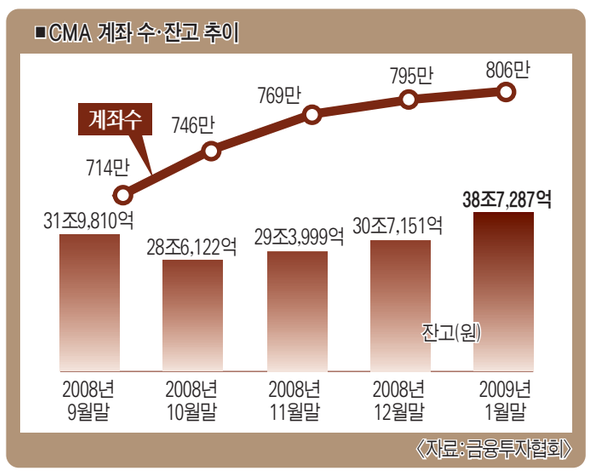
이렇게 되면 CMA를 이용하는 고객은 현금 인출이나 송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지로 서비스, 자동이체, 현금자동지급기(ATM) 이용, 월급계좌 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증권카드가 은행의 신용카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데다 하루만 맡겨도 연 5% 안팎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편리한 서비스에 비교적 고금리까지 보장한다. 보통 월급통장용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요구불예금이 현금 잔액에 대해 사실상 제로 금리인 연 0.1~0.3% 금리만 제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연계상품 대기=증권사들은 CMA의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 곧바로 은행 고객을 빼내오기 위해 이체와 송금 수수료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대증권은 우리은행과 제휴해 '현대CMA-우리체크카드'라는 이름의 제휴 카드를 준비중이다. 양사 고객이 자유롭게 CMA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과 계좌이체는 물론 신용카드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을 소유한 금융그룹 계열사들은 공동의 사업영역 발굴은 물론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나서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CMA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내놓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투자대상 구별해 가입해야=CMA 계좌로 월급통장을 개설하거나 여윳돈을 넣어둘 요량이면 요즘이 가입 적기다.

재테크 전문가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타기'를 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다만 은행들도 증권사에 맞서 결제계좌를 둔 주거래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CMA는 은행예금과 같이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CMA는 투자 대상에 따라 종합금융형, 환매조건부채권(RP)형, 머니마켓펀드(MMF)형으로 나뉜다. 이 중 종금형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CMA를 선택할 때는 금리부터 감안해야 한다.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때에는 확정금리를 주는 RP형보다 실적배당형인 MMF형이 유리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밸런타인 데이 떡 선물하세요 10일 오전 떡 전문점인 '시루연'이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지역특산품으로 만든 '밸런타인 데이 떡'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워크아웃 대한조선 오늘부터 실사 재개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대한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가 11일 재개된다.

산업은행은 경영관리계획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중단됐던 대한조선에 대한 실사를 1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안진회계법인으로 결정됐으며, 실사단과 함께 산업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영관리단도 이날 해남 조선소 현장에 파견된다.

이로써 실사단 파견 3일만인 지난 4일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대한조선에 대한 실사가 1주일만에 재개돼 워크아웃 개시 등 기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사단은 통상 3개월정도 걸리는 실사기간을 가능한 앞당겨 2월내에 실사를 마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한조선측이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실사를 재개하게 됐다"며 "실사단의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병익 차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나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간 양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자금경색이나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을 아끼지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외국인 소유 광주·전남 땅

3,924만㎡ … 동구의 80%

외국인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3천923만8천㎡로, 광주시 동구 면적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9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광주·전남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총 3천923만8천㎡로, 가격은 2조6천792억원에 이른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3천574만7천㎡)에 비해 9.7%(349만1천㎡)가 증가한 것이고, 시가로는 598억원(2007년말 2조6천194억원)이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329만㎡로, 전년도 같은 기간(346만9천㎡)보다 면적은 5.4%(17만8천㎡)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312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외국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225만2천㎡로 가장 많았고, 미국 교포가 39만5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지역은 외국인 보유 땅이 367만㎡에 달하면서 지난해 말에 비해 면적은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도는 외국기업 유치와 여수엑스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92만6천172㎡에 이르고 합작법인도 2천362만5천㎡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에스엔앤시㈜(뉴칼레도니아)가 광양시의 공장용지 0.20㎢를 사들이는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외국계 법인 등의 토지 매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7,000만달러

光銀 외화 조달 성공

광주은행은 유럽계인 ING은행으로부터 7천만달러의 외화를 차입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차입한 외화는 기한부 수입신용장 인수한도 5천만달러와 외화자금조달 2천만달러를 포함한 금액으로, 차입기간은 6개월이다.

조달 금리는 리보+3.5%이며, 정부의 지급보증없는 순수한 광주은행의 신용 차입으로, 지역 수출·입업체 지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 이에앞서 지난해 말 해외 은행으로부터 8천만달러를 차입하는 등 3개월사이에 1천500만달러의 외화를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은행 BIS 비율 10%면 충분"

진동수 금융위장 "공적자금 투입 단계 아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단계는 아니다"며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해 기업구조조정과 신용공여 확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만 유지하면 된다"며 "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자산관리공사(캠코)나 산업은행이 펀드를 만들고 일반인도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되 정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20조 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끝냈다"며 "은행들이 이 펀드를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 기업 구조조정, 기업 신용공여 확대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은행이 나름대로 안정적 수준의 BIS 비율 등 자본상태를 갖고 있어 현재로선 그 수단을 활용할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불확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나중에 필요할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감독규정상 은행은 BIS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7%, 자기자본비율이 10%이면 1등급으로 건전하다"며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BIS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종전 금융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